

김동연 “위법 행위” vs 심재철 “시스템 구멍”

기재부 대정부 질문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놓고 충돌 심 “주요 재난일 술집 기록”…靑 “업무 위한 정당 비용” 반박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심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보좌진의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접속이 부당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재차 접속 동영상을 시연하며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 시스템이 뱅 뚫려있었다”며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표시가 돼 있다면 들어가야 했다.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콜롬버스 달걀 같은 것으로 달걀을 세운 것을 보고는 누구나 세울 수 있다”며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당국이 밝힐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말해 심 의원 보좌진

의 접근이 잘못 됐음을 거듭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질의 말미까지도 “함께 접속 시연을 하자”며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라고 제안했지만 김 부총리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부총리인) 제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주요 재난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다녔다며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1~25일에 진행된 을지훈련 기간 중 3일 동안 와인바와 수제맥주집,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포항지진 발생 일인 지난해 11월 15일과 여진일인 같은 달 20일, 태풍 솔릭 피해 당일인 8월 23일에도 업무추진비 카드가 고급 스키장과 호텔 중식집, 한우집 등에서 사용됐다.

심 의원은 “을지훈련이 되면 청와대는 공무원들은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간다”며 “밤

11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등 비정상 시간대의 사용도 여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병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겼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주요재난 발생 당일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정 업무를 위한 정당한 비용 처리였다고 일일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는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2000여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 업무를 섬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 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밝혔다.

끝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공방

여 “국제기구서 제안하는 정책”…야 “전면 개편을”

여야는 2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야당은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임금주도성장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각국에서 이미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의 성공 사례를 열거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10년간 증명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다른 처방을 써야 할 때”라며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먹고 굶고 못 살게 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거도 부족한 이론에 빠져들어 정작 한국경제의 만성질환을 오히려 미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운영실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19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9.7%가 증가했지만 농업예산 증가는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예산에 ‘활력예산’이라고 붙였는데 1%의 예산 증가로 농업에 활력이 들어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문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野 강력 반발

靑 “모든 의혹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유은혜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상곤 전 장관의 후임으로 유 장관을 지명받지 33일 만이다.

위장전입과 정치자금 허위보고 등의 의혹을 두고 야권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수장의 공백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교육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지만 생각의 방향은 다 달라 어렵다”면서 교육의 완전국가책임제, 고교무상 교육 등의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명장 수여, 시어머니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가운데는 유 장관의 시어머니 정중석 씨. /연합뉴스

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해 “교육혁신을 기대한다”며 환영 메시지를 내놓은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가 하면,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국정감사 일정 연기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상황에 따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유 장관은 4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협치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민생·개혁 입법은 물론 예산안 처리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유 장관이 맞닥뜨려야 할 교육 분야의 현안도 적지 않다. 당장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추진 등이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또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정책의 중심을 잡아가는 일이 급선무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와 전쟁”

“유보자 사법처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이라 칭하며 처벌을 선포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허위 가짜뉴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해 강하게 대응한 것은 지난주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방명록 글 왜곡사건이 직

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고(故) 쩌 다이 꽁 베트남 주석 장례식에 참석한 뒤 호찌민 전 주석의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글을 남겼다.

그런데 이 총리가 ‘호찌민 주석’에 관해 쓴 글임에도 일부 네티즌은 ‘주석님’이라는 부분만 부각했고, 급기야 ‘김정은에 대해 쓴 글’이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돌았다.

특히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새로 내놓는 정책이 가짜뉴스 때문에 국민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책 초기 부작용이 최소화(針小樵大)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하다 하다 어떻게 이런 가짜뉴스까지 나오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국감 증인 채택

AG 선수 선발 의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선발과 관련해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위 여야 3당 간사는 18명의 일반 증인과 4명의 기관 증인, 3명의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

지난해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선 감독은 올해 8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일각에서는 선 감독이 특정 구단 청탁을 받고 일부 선수를 선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체위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위원들이 선 감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며 “오는 10일 문체위 국감 날 국회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위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조현재·박민권 전 차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체육적폐의 추가 진실규명을 위해 박원우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을 증인으로, 박태환 선수 아버지 박인호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 (062) 412-2800